



[해설] 1세대 카페 '커피빈' 매각 수순? 버랑 끝 프랜차이즈 03



Economy

코스피	2370.86 (+12.45)	코스닥	830.67 (+6.02)
금리 (국채 3년)	0.934 (+0.023)	환율 (원/달러)	1131.90 (-7.50) (21일)



구호 외치는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뉴스시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피할 수 없는 '뉴노멀' 노동법 대전환 타이밍

2부. 포스트 코로나

② 언택트 경제 가속화

재택·유연근무제 등 환경 변화에 임금 체계 등 관련법 개정 급물살 韓 노동법 30년전에 머무른 상태 노사관계 선진화 위한 개혁 필요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노동법 개정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형태가 다양화하고, 언택트 산업이 확산하는 등 노동개혁 입법의 당위성이 명확해지면서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택(원격)근무를 했고, 재택근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장은 1831곳으로, 대상 근로자는 1만 43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34개 기업에서 72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 근로자가 200배가량 늘었다.

올해 남은 4개월을 고려하면 재택근무 근로자는 2만 명 안팎에 달해 전년 대비 300배가량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재택근무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 수준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은 인센티브 부여, 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을 받는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업주나 노동계의 인식 전환도 필

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구조와 노동형태의 변화가 급속화하자 관련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공정경제를 위한 기업 구조 개선과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우리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법은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관계법이 대폭 바뀐 뒤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다"라며 "코로나 이후 4차 산업 전환 과정에 접어들 만큼 경제·사회 전반이 새로운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법을 개편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시간도 유연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이 나오자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노동 유연화 등 반(反)노동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 입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과 전혀 상반되고 오히려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을 발의해서 국회로 넘겼다"며 "그 어떤 내용보다 심각한 내용이 담긴 현 정부의 입법 발의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연대해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4일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3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반도체 격변기, 삼성에 쏠리는 눈 '100조 실탄' M&A 언제 나서나

美 이어 베트남서도 투자 러브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에서도 투자 요청을 받았다. 반도체 업계 빅딜이 이어지는 상황인 가운데, 100조 원 규모 '실탄'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일 베트남에서 응우옌 쉰억 폭 총리와 면담했다. 이날 폭 총리는 예상대로 이 부회장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선 생산 활동을 점검하고 투자 확장 수요를 확인하겠다는 것. 자리에 노태문 무선사업부장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동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초 미국으로부터도 투자 요청을 받았다. 일단은 오스틴 공장에 EUV 설비 도입을 고려중이

긴 하지만, 대규모 투자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안팎에서 대규모 투자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 생산 기지는 중국 시안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 2곳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경쟁 업체들이 추격을 본격화하면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을 보유한 것까지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D램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40%대, SK하이닉스가 30%대 점유율을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절대 강자인 TSMC가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점유율은 TSMC가 53.9%, 삼성전자가 17.4%로 좁혀졌다

치를 줄이지 못했다. TSMC가 미국 등에 투자를 가속화하는 상황, 삼성전자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재편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가 영국 ARM을 인수하며 몸집을 삼성전자 이상으로 키웠다. AMD도 삼성전자 인수설이 돌았던 자일링스 인수를 타진하며 빅딜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같은 인수·합병 바람은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나 빅딜에 나설 여력은 충분하다. 2016년 이후 대규모 인수 합병을 완전히 멈춘 상태, 현금보유고가 100조원을 넘는다. 그동안 자일링스나 NXP 등 우량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결국 아무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 거취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재용 기자 juk@



2020 제약 & 바이오 포럼 개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 & 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이사가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실수요자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총력"

홍남기 부총리 '경제상황 점검회의' 4분기 내수·고용 회복이 핵심 과제

정부가 최근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산 영향에 따라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났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과제"라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는 이를 위해 소비쿠폰을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진행하는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경제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도 잘 통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갖고 일어서 앞을 향한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